

## “완성차 3사 노동자 정의로운 산업전환 앞장선다”

### 자동차산업 미래전환 협의체 마련 요구...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법 입법청원”

금속노조가 6월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미래전환 협의체 마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대차 자본 주도·재벌 독식 산업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가 함께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재벌 중심·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 ▲글로벌 자본 규제와 외투 완성사 국내공장 미래차 전환 계획 제출 촉구 ▲원·하청 상생 구조 확립과 위기 부품사 보호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를 요구하며 “노동은 지금껏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할 수 없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며 “올해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협약을 사업장별로 체결하고, 그 기세를 몰아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법 10만 입법청원과 노조법 제·개정을 청원 성사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상수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엔



진과 변속기 생산이 줄면서 조합원들은 고용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며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부품사들의 고용불안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상수 지부장은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과 함께 완성 3사 조직 노동자의 힘으로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켜내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종태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완성차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태 지부장은 “기아차는 젊은 청년노동자를 산학인턴이라고 채용해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쓰고 버리고,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는 베테랑이라는 이름의 반값 비정규직으로 재채용하고 쓰고 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종태 지부장은 “정부가 실사구

시하는 마음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정규직 철폐로 고령 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준 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국장은 “글로벌 지엠은 2025년까지 전 기차 30여 종을 출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공장 미래차 생산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부평 2공장 폐쇄 같은 암울한 소식만 흘리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준 사무국장은 “노동자가 더는 외투 자본 볼모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외국투자기업들이 참여하는 산업전환협의체가 필요하다”라면서 외투 완성사 미래전환 노사정 협의체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종료 후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파괴 나셨나?

##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원청의 복수노조 악용·민주노조 파괴 규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 본사 타격투쟁을 경고했다.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연 ‘복수노조 설립해 민주노조 파괴와 자회사 선동하는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업체를 자회사로 둔갑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진의 3,800명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모두 올려 양재동 본사를 에워싸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 749명을 정규직 고용하라는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다.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금속법률원장은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은 부당노동행위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현대제철에서 자회사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나타났다”라면서 “현대위아가 평택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는데,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평택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기존 사내하청 업체들을 울산으로 보내고 평택공장에 별도 법인 자회사를 설립했다.

조합원들에게 평택에서 일하고 싶으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라고 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김유정 법률원장은 “원청의 자회사 꼼수는 탈법행위이다. 여기에 어용노조 설립을 이용한 노조탄압 행위까지 더하면 부당노동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시정명령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업체의 자회사 둔갑과 어용 복수노조로 당진공장 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용화 수석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투쟁을 선포하고 응징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지회는 2019년 불법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고,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2018년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결과로 2021년 2월 전체공정 516명에 대해 직접 채용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아냈다. 아울러 당진공장 근로감독 결과 대부분 공정, 749명을 원청이 직접 채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정지시가 나왔다.





# “정년연장법, 청년·자녀 세대와 함께 사는 법”

노조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지부, 정년연장 촉구 ... “국내공장 일자리 만들라”

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 지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는 6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년연장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완성차지부들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완성차 자본이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철회하고 국내 공장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부들은 “완성차들은 4차 산업을 핑계로 정년퇴직자 자리에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라면서 “신입사원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

서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65세까지 단계 정년연장을 약속했지만, 자본의 눈치를 보며 청년실업을 핑계로 정년연장 입법화를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자본이 국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지부들은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43.8%로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지부들은 ▲60세 가계 지출 집중 ▲65세까지 생계수단 대안 부재 ▲60세 고숙련 노동력 노동 단절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정년 65세 이상을 법제화했고, 영국, 미국 등은 정년 차별 제도를 철폐했다며,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완성차지부들은 숙련 노동자를 일시에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면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 사회 안정을 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부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세수 확보로 국가 부담이 줄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낮춰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국민 노후보장과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 입법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